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미 민주당, 의료보험개혁법안 발표

-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화요일,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개혁법안을 발표했으며 동 법안은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지출을 수반할 것으로 알려짐.
  - 이번 법안은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, Medicaid가 지불하는 의료비용 증가를 억제하고, 보험회사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험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.
  -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게 될 총 비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짐.
  - 법안은 세금을 통해 이 같은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며, 저소득층의 경우 1%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5.4%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할 계획임.
  - 또한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직원 급여의 8%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,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수입의 2.5%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.
  
- 오바마 대통령은 올 여름 중 법안이 처리되도록 의회를 독려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이견이 분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며, 경영자 단체와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즉각 반발함.
  - 하원 대표들은 이번 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도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.
  - 주요 경영자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종업원 의료보험 가입을 고용주에게 강제할 경우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료보험 적용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.
  - 보험업계는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 고용주가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낮은 보험료를 제시하는 공적보험으로 인해 민간부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.

(USA Today, 7/14)